

과거가 변해야 미래가 바뀐다? : ‘세계화’ 시대 북한(역사학)의 딜레마 —개정판 《력사사전》(1999~2004) 분석을 중심으로

Yuk Yeong-su,
Chungang University

I

역사를 다시 쓰는 행위는 단순한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담론/권력의 문제이다. 특히 한 국가의 공식기관이 주도하여 역사지식체제를 총체적으로 재 분류, 수정, 서술하는 것은 중대한 국민(재)통합과 국가(다시)만들기 작업에 다름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1971년에 간행했던 《력사사전》(이하 《구 역사사전》)의 개정판(평양: 1999-2004, 이하 《신 역사사전》)을 한 세대 후에 출간한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주지하듯이, ‘위로부터’ 하달된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준수하여 국가의 존재이유를 강화하고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북한에서의 역사서술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1971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에 북한은 어떤 새로운 외교적 시련, 정치경제적 위기, 혹은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개정판 《력사사전》에 반영되었을까? 《신 역사사전》은 주체사관으로 대변되었던 김일성체제가 김정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신호탄인가?

《력사사전》초판이 간행된 이래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야만 했다. 1972년 소위 ‘사회주의헌법’으로 공표되었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1980년에 공식화된 부자세습체제선언과 함께 김정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로 계승되었다. 1978년에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한민국(이하 남한) 제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으며, 1980년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레이거노믹스’와 ‘별들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우익보수주의와 냉전체제가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시작된 동유럽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의 종말이라는 어수선한 국제정세 속에서 발생한 1994년 김일성 사망은 북한지배층과 인민들을 심리적인 대공포 상태로 몰아넣었다. 한 때 빛났던 사회주의는 이제 ‘죽은 개’가 되었고, 친애하는 ‘민족의 태양’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으며, 팩스 아메리카나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파고는 높고도 거칠었다.

위와 같은 적대적인 국내외 정세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혁명의 전야에 레닌이 물었던 질문—“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을 되씹어야만 했으리라. 사적 유물론과 반(미)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주체사상과 민족제일주의를 다른 축으로 하여 구축되었던 역사관과 세계사인식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인가? 미국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좌표조정 혹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북한지배층과 인민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고뇌의 선택들이 《신 역사사전》의 두터운 갈피마다 숨어있는 것이다.

II

위에서 간략히 스케치한 시대적 배경이 《신 역사사전》 탄생의 조건이었다. 북한이 현재 서 있는 지점에 대한 재점검과 대안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절박함이 ‘과거 다시 쓰기’라는 국가차원의 출판과업으로 집약되었던 것이다. 혹시 《신 역사사전》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세계화의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가려는 김정일 선장이 안팎세상으로 날려 보내는 화해와 대화의 초대장이 아닐까? 그렇다면, 《구 역사사전》에 활자화하여 각인시켰던 과거를 반성(?)하고 수정함으로써 북한은 ‘좋은 미래’를 (누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사전에 대한 외형적인 분석부터 시도해 보자.

개정판은 초판의 부분적인 보완이나 수정에 만족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의 양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편성을 단행했다. 우선, 2권으로 구성된 《구 역사사전》과 달리 총6권으로 제작된 《신 역사사전》은 이전의 총 2,422쪽보다 오히려 다소 적은 총 2,109쪽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초판에 실린 3,402개 항목에 비해 개정판은 총7,752개 항목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구 역사사전》에 실린 한국사 관련항목이 2,910개(85.5%)와 세계사 관련항목이 492개(14.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 역사사전》은 한국사 항목이 5,726개(73.9%), 세계사 항목은 2,026개(26.1%)로 집계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사 비율이 10여% 감소된 반면에 세계사는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한국사 관련 항목이 대략 2배 증가했고, 세계사 관련 항목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구 역사사전》에 올려진 265개의 서양사 항목(7.8%)과 173개 동양사 항목(5.1%), 54개의 비교사 항목(1.6%)에 비해 《신 역사사전》에는 1,010개 서양사 항목(13.0%), 705개 동양사 항목(9.0%), 240개의 비교사 항목(3.0%)이 각각 게재되었다. 전체 항목에서 서양사와 동양사가 차지하는 항목이 초판에 비해 약 2개 증가된 것이다.

위와 같은 통계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력사사전’에 더 가까웠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 역사’에 편중되었던 《구 역사사전》에 비해서 《신 역사사전》은 세계사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뜻이다. 사전의 전체체제를 살펴보면 1권과 2권에서는 근대사까지의 한국사를, 3권과 4권에서는 한국현대사를, 5-6권에서는 ‘외국사’를 각각 취급한다. 총 6권 중에서 4권이 한국사 분야에 할애되어 한국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판과는 달리 세계사 영역이 분리(독립?)되어 편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지난 30년(1971~1999) 기간에 “국제적으로 커다란 사변” [아마도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를 지칭하는 듯] 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사 연구 분야에서도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서양사 분야에서 미국사 관련 항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초판에서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로 지목했던 미국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연구축적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표시로 보인다.

사전의 형식적인 변화 이면에 있는 문체와 편집기술의 변화에 묻어있는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초판보다 전체쪽수는 다소 줄었지만 게재 항목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에서 유추되듯이, 《신 역사사전》은 이전의 거칠고 격양된 표현을 자제하고 좀 더 축약되었지만 밀도가 높고 절제된 서술양식을 지향했다. 또한 력사연구소라는 단체 명칭으로 서술.간행되었던 초판과는 달리 개정판에서는 각 권 내용을 ‘심사’(감수?)했던 전문가의 실명을 밝히고, 제6권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집필과 편집에 참여했던 총 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등 여러 대학과 기관에 종사하는 집필자들의 밝힌 것은 북한 역사학계가 1990년대에 이르면 이전에 있었던 해석상의 논쟁을 정비하고 내부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섰다는 지표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체계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는 《신 역사사전》에 등재된 서양사 관련 항목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구 역사사전》을 관통하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던 사적 유물론과 사회주의사상이 《신 역사사전》에서도 철저하게 견지 혹은 약화 되었을까? 이 의문은 김일성 사망과 동구사회주의국가 붕괴라는 절대위기에 직면한 북한 지배계층의 현실인식과 국가관의 변화를 진단해 보려는 의도이다. 둘째, 미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할 만큼 매우 강경했던 초판의 반미제국주의 감정이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모색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북한이 어떻게 편입 혹은 저항하려는 지를 예측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북한체제가 세계화 시대의 개막을 즈음하여 선보인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신 역사사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리매김할 것인가? 개정판 역사사전 편찬과 출판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필자는 비교분석방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초판에는 게재되었지만 개정판에서 삭제된 항목들은 무엇이며, 개정판에 새로 첨가된 항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동일한 항목에 대한 묘사가 초판과 개정판에서 어떻게 되풀이 혹은 수정되는지를 입체적으로 관찰·분석할 것이다.

III

동구권 현실사회주의 국가해체의 충격파는 《신 역사사전》에서 두 가지 양상으로 감지된다. 첫 번째 반응은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나라와 어제의 적에 대한 교차된 애증으로 표출된다. 예를 들면, 초판 ‘쏘련’ 항목에서 2쪽 반의 분량으로 공산주의정권 탄생의 역사적 의의를 장황하게 선전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정판에서는 달랑 반쪽 분량으로 소비에트 연방해체의 반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소련 공산당은 복수정당제에 의한 의회제 채택, 시장경제로의 이행,

소유권의 인정 등을 선언함으로써 연방 내부에서 민족적 분쟁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이 연방이탈이라는 “반인민적 조약”을 체결(VI: p. 179)하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동반한 독일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씁쓸하다. 초판에서는 고대 프랑크왕국의 게르만적 전통을 이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등장을 “독일력사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점”(I: p. 525)이라고 극찬했지만, 개정판에서는 동독이 “고르바췌프와 도이첸라드의 현대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배신행위”(V: p. 98) 때문에 몰락했음을 애도했다. 또한, 초판에서는 ‘서부독일’이라는 경멸적인 명칭으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군국화와 파쇼화를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II: p. 95-96)했던 나라를, 개정판에서는 ‘도이칠란트연방공화국’라는 정식이름으로 승격(?)시켜 독일민족의 적자로서 1990년에 독일통일을 완수했고 2001년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V: p. 96-97)고 밝혔다. 북한이 외교적 파트너로 삼아야 할 정통독일의 주인공이 교체되었음을 가슴 아프지만 인정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이전에는 ‘제국주의 나라’라는 주홍글씨로 쓴 명찰을 붙이고 비난했던 나라를 향한 다소 우호적인 제스처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초판에서 “서구라파의 제국주의 나라”로 지목되었던 ‘프랑스’(II: p. 915)가 개정판에서는 ‘제국주의 나라’라는 꼬리표가 삭제되고 ‘거북한 과거’였던 프랑스-알제리 침략전쟁에 대한 언급도 생략되었다. 그 대신 사회당 대통령 미테랑 정부의 업적과 1984년에 양국 간에 상호 총대표부를 설치했다고 소식을 덧붙였다. 초판에서 “실업상태인 인민들이 배고파 죽고 도덕적인 범죄가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로 묘사되었던 파리, 런던, 뉴욕 등의 항목들이 모두 삭제된 것도 자본주의 국가들의 심기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소비에트연방붕괴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신 역사사전》의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심층적인 것으로 맑스-레닌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그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그 시대적 제한성과 사상리론적 미성숙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에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V: p. 183)는 충격적인 선언이 전격적으로 ‘맑스-레닌주의’ 항목에 기입되었다. 시대적 착오성과 사상적 불완전성이라는 이중적인 한계를 가진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과 유지가 어렵다는 ‘뒤늦은 깨달음’에 도달했던 것이다. 초판에 등장했던 각국의

‘공산당’ 항목들이 깡그리 삭제되고 ‘초기(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을 재발견하려는 노력도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과학적’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리라. 초판에서 맑스-레닌→스탈린→김일성-김정일로 계승되는 사회주의를 ‘정통계보’로 강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그 ‘원조’인 맑스-레닌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을 공개적이며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1990년대 말에 이르면 맑스-레닌주의가 기초한 사적 유물론의 유보적인 용도폐기를 선언할 만큼, 주체사상과 결합한 민족제일주의사관-북한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특수한 길-이 정착기로 이행했다는 자신감의 과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흥미롭고도 불가해한 점은 이런 직설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 역사사전》에 기재된 사회주의 관련항목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수호하려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맑스-레닌주의와 경쟁했던 다른 사회주의 일파들에 대한 맹공격이 그 증표이다. 예를 들면, “로동귀족의 이익을 반영한 우경기회주의적 사상조류”인 ‘로동조합주의’ 혹은 ‘트레드유니온주의’(V: p. 132; VI: p. 93), “소수혁명가들의 음모적이고 테로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타산”한 좌경모험주의적 사상조류인 ‘블랑끼주의’(V: p. 243-4), “점차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인 반동리론을 설교”했던 ‘페이비안협회’(VI: p. 123), 반동적 부르주아 내각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배신한 추악한 우익사회주의인 ‘밀레랑주의’ 혹은 ‘내각주의파’(V: p. 210, VI: p. 81-82), 생산수단을 노동조합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부르쵸아적 기회주의 사상조류의 하나”인 ‘싼디칼리즘’ 등-맑스-레닌주의에 도전했던 온갖 종류의 사회주의적 실험과 개혁을 일망타진해야 할 수정주의 분파로 《신 역사사전》은 분류했다.

시대적 과제달성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상표 사회주의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려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불타서 무너진 사회주의 종갓집의 잣더미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북한 당국의 순교자적 입장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 러시아공화국에서 최근에 “좌익력량이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주의 재생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졌으며 지방선거들에서 좌익세력들이 승리를 이룩하였다”(V: p. 139)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이런 태도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에 감행했던 “좌경적 과오의 엄중한 구속에서 벗어나” 맑스주의 노선을 재건했다고 회고(VI: p. 29)하는 장면에서도 옛 애인을 향한 집요한 애정이 피어난다. 북한당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맑스-레닌주의’를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으로 포용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뜻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의 단호한 결별과 편집적 집착이라는 틈바구니에 갇힌 북한당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종교관에서도 그대로 노출된다. 종교의 최소한 허용과 적대적인 배척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우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가르침에 복종했던 초판과 달리, 《신 역사사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포즈를 취했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암해, 정탐행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바티칸’ 항목(I: p. 854)이 삭제되고,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항목(VI: p. 83)이 새로 추가된 것이야말로 그 조짐이다. ‘신교/프로테스탄트교’ 항목에서도 초판에 등장했던 정치공세—“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동원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의 총복으로 복무한다” 등—가 사라졌다. 불교의 경우에도 인과응보설과 현실도피주의 등을 조장함으로써 통치계급의 반동정치에 복무한다고 꾸짖었던 초판의 계급적인 비판내용(I: p. 961)이 삭제되었다. ‘포이에르바하’의 핵심사상인 무신론적 기독교비판이 개정판에서 완전히 누락된 것도 《신 역사사전》에 구현된 종교에 대한 유연성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조처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종합적인 판단에서 연유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북한의 종교에 대한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종교와 제국주의 연결고리의 포기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와 반공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기독교의 역사적 과오가 용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판에서 ‘카톨릭교’의 역사적 기원과 교리 등을 비교적 객관적이며 차분하게 설명하다가 “근세 우리나라에 침습한 카톨릭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로서 조선인민의 생활과 사회적 진보 및 민족적 발전에 막대한 해독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VI: p. 76)라는 경구가 돌출한다. 또한 1882년 ‘조미조약’ 체결로 기독교가 합법화되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기여 들었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포교활동을 벌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에는 “군대에까지 교회를 차려 놓고 있다”(VI: p. 15-16)고

고발했다. 일본식민시대에 기독교 각 교파 중앙조직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일본그리스도교단’에 통합되어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에 적극 가담하였다”(V: p. 48)는 부끄러운 기억도 환기시켰다. 이와 같이 《신 역사사전》은 ‘종교 =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전의 교조적인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제국주의 개’ 노릇을 했던 종교에 대한 경계와 감시의 팽팽한 끈을 놓지는 않았다.

IV

초판과 구별되는 개정판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복잡하고도 이중적인 심정이다. 한편으로는 이전보다는 덜 적대적인 태도를 내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역사사전》에 팽배했던 반미적인 감정을 완화하지 않는다. ‘미국’ 항목의 서술내용을 비교해 보자. 초판에서 첫 줄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라고 도발적으로 소개(I: p. 825)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판에서는 다소 절제된 감정을 유지하면서 이전의 거친 표현들—“해적의 후손들인 미제국주의자들은…자본주의 세계 범죄자의 소굴”(I: p. 828 & p. 830)—을 삭제했다. 그리고 초판에서 “안팎으로 호되게 얻어맞고 있으며 썩을대로 썩어가는 미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을 결론 삼아 첨부했던 것과는 달리, 개정판에서는 “미제는 랭전종식 후 세계유일의 ‘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세계를 자기의 지배 밑에 넣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발광하고 있다”(V: p. 202)며 미국패권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수용했다.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변화에서도 초강대국을 쓸데없이 도발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조심성이 엿보인다. 초판 ‘국제련맹’ 항목에서 월슨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유엔’ 항목에서도 ‘조선문제’와 관련한 미제의 음모와 책동 운운 부분이 제거된 것에서 이런 노심초사가 배어난다. 개정판 ‘올림픽경기’/‘국제올림픽위원회’ 항목에서 초판에서 언급되었던 북한의 공식국가명칭을 둘러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 공작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사라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몇 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은 북한이 미국에게 화해와 대화를 요청하며 보내는 은근한 윈크인가?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신 역사사전》역시

반미.반제국주의라는 초판의 기본노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구 역사사전》과 마찬가지로 개정판 필자들도 미국 = ‘악의 중심축’이라는 방정식을 고수했던 것이다. 이런 신념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실상 ‘랭전’이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직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꿈수로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북한의 확신에 근거한다. 군비경쟁,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위협, 대규모 전쟁연습과 실제침입 등을 동원한 미국의 모험주의가 “특히 우리나라를 주되는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다”(v: p. 206)고 《신 역사사전》이 전율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대통령 = “조선의 철천지 원쑤”라는 초판의 화법이 개정판에서도 되풀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 역사사전》이 기록한 미국역대 대통령들의 죄과를 간략히 열거하면, ‘타프트’는 ‘팔라외교’로 가난한 나라들을 매수하고 한일합방을 위한 외교밀약이었던 ‘가쓰라-타프트협약’을 조작했으며(VI: p. 89), 윌슨은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3.1봉기를 모독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지”(VI: p. 281)했고, 트루먼은 “전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 목적으로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VI: p. 92)했다. 닉슨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시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전략인 ‘새 아시아정책’을 채택하여 또 다른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V: p. 81) 이들이 거주했던 백악관에 대한 묘사가 초판의 “제국주의 원흉의 소굴”(I: p. 988)에서 개정판에서는 “백 가지 악이 들어 찬 집”(V: P. 247)으로 희극적으로 바뀌었지만, ‘악의 축’의 발생지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 대한 신랄한 증오는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이 자랑하는 거의 모든 영웅과 미국정부가 수행했던 거의 모든 국내외정책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한 생을 범죄적인 싸움터에서 보냈”던 더글라스 맥아더는 “조선전쟁도발자의 한 놈이었으며 수백만 조선인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아름다운 삼천리강산을 잣더미로 만든 원흉”(V: p. 211)이었다. 또한, “고압전류가 흐르는 높이 3.5m의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는 곳에 위치한 미국중앙정보부는 ‘5.16군사정변’을 조종하는 등 “인민탄압과 대외침략을 위한 미제의 악명 높은 모략기구”(v: P. 205)이다. 미국중앙정보부의 직접적인 조종 밑에 그의 ‘별동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케네디 대통령이 조직해서 제3세계에 파견했던 ‘평화군’(Peace

Corp)이라고 《신 역사사전》은 폭로했다. 교사, 의사, 기술자, 선교사 등의 신분으로 “그 나라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한 미국 젊은이들은 “그들 속에 미국식 생활양식을 부식시키면서 숭미사상을 고취하고…해당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부전복음모를 꾸”였다.(VI: p. 103) 이런 허울 좋은 ‘평화군’이야말로 “한편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들고 다른 편으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미제의 세계전략(V: p. 206)의 본보기이다.

반미·반제국주의 외에 《신 역사사전》 미국 관련 항목들이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주요이슈는 흑백갈등문제이다. 초판에서 드문드문 등장했던 ‘흑인문제’가 개정판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미국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하는 인종갈등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미통치자들의 윤리적 기만성을 폭로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흑인도망노예 드레드 스코트의 공민권을 부정했던 1857년 미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미국부르조아헌법의 기만성과 반인민성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V: p. 108)이었다면,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96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흑인폭동도 “미국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 자유, 평등, 박애의 기만성을 날낱이 폭로하였다.”(V: p. 136) 흑백갈등이라는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려 미국체제를 동요시키려는 북한의 의욕과잉은 때로는 근거 없는 혐의와 과장된 고발로 이어진다. 미국지도자들이 반전평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테러단체인 ‘3케이단’(Ku Klux Klan)을 동원하였다(V: p. 268)거나, 월남전에 반대한 흑인들이 군수품공장을 멈춤으로써 미제전쟁상인들에게 타격을 가했다거나, 지금도 미국흑인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같은 일을 하고도 백인들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V: p. 203)는 등의 설명들이 그런 사례이다.

요약하면, 종교에 대한 이중적인 자세와 마찬가지로 《신 역사사전》의 미국관도 사려 깊은 신중함과 원초적 증오가 혼재된 양상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동구권의 붕괴와 미국패권주의의 강화라는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이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한다는 증거인가? 아니면, 앞에서는 적의 급소를 계속 타격하면서 뒤쪽으로는 명분과 실리를 획득하려는 북한 특유의 고도적인 계산법인가? 필자는 후자 쪽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신 역사사전》이 모든 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나쁜 놈’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단서이다.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는 “그들의 훌륭한 발명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미국의 항공기술개척자들”(V: p. 127)이었다고 칭찬했고,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서도 전혀 부정적인 언급—가설적으로 말하자면, “각종 자본주의적 무기인 전화와 축음기 등을 발명하고 스스로 전기회사를 설립한 반동적인 부르주아” 운운—없이 그의 우수한 발명품들을 소개(VI: p. 287)했다. 이런 예외적인 인물묘사는 정치와 과학기술을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함으로써 ‘미래 놈’들과도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협력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한편, 생략된 항목 뒤에 숨어있는 고민을 헤아려 봄으로써 북한의 암묵적인 미국관을 역추적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신역사사전》에는 닉슨 이후의 최근 미국대통령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판이 출간된 시점에서 적어도 지난 20년 사이에 재임했던 미국 대통령들—포드, 카터, 레이건, 클린턴, 아버지—아들 부시 등—과 이들이 주도했던 각종 국내외정책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뚜렷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가 사회주의국가들을 ‘악의 축’으로 명명하여 냉전체제를 버랑 끝으로 내몰아 세웠고 부시 행정부는 중동지역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냉전을 열전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행위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부재하다는 점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경제지원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전직 미국대통령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배려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숨 쉴 체면 공간’을 확보해 두려는 의도가 특정항목들의 생략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V

‘북한문제전문가’들이 견뎌야 하는 가장 큰 직업적인 어려움은 (아마도) 불완전한 정보를 밀천 삼아 북한의 ‘미래를 점쳐야’한다는 강박관념일 것이다.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난 ‘깡패국가(rough nation)’로 분류되는 북한의 독특한 국제적 위상은 그를 단순히 해석의 대상으로만 방임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항상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거의 모든 글들이 선부른 예언이나 이데올로기적 올바름에 대한 공박으로 귀결되는 이유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런 직업적 난관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서양사 전공자로서 북한문제에 관한 한 (미안하게도) 거의 완벽한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외교전문가도 아니며 통일문제연구가도 아닌 비전공자가 한가롭게 《력사사전》의 초판과 개정판을 번갈아 읽으며 추수한 잠정적이며 단편적인 생각거리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 역사사전》은 《구 역사사전》의 일부 내용을 단순히 뺄질한 수준이 아니라, 북한 역사관과 세계관의 근원적인 변혁을 예고하는 혁신적인 개정판이다. 이전의 폐쇄적인 조선역사우선주의에서 탈피하여 좀 더 개방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고충이 사전의 편집체제와 내용서술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정판에서 한국사 항목비율이 축소된 대신에 세계사 항목이 2배의 비율로 증가한 사실이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 준다. 초판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김일성의 교시가 개정판에서 거의 사라지고 김정일 교시로 대폭적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도 예사로운 변화가 아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구 역사사전》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이 냉전시대의 한 가운데를 거슬러가며 남긴 유품이라면, 《신 역사사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맞춰 인민들에게 선사한 “말없는 길잡이”(I: p. 1)이다.

둘째, 《신 역사사전》은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북한 권력내부의 상반된 두 입장의 타협과 갈등의 기묘한 산물처럼 보인다. 동구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후 북한 판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지향하려는 ‘개혁파(party of movement)’와 이런 움직임에 저항하여 동요된 북한사회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두 축으로 회귀시키려는 ‘보수파(party of status quo)’ 사이에 전개되었던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전의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미련과 결별선언, 종교에 대한 중립적인 이해와 원색적인 배척, 미국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와 은밀한 구애 등—《신 역사사전》을 관통하는 이런 일련의 모순된 이중성의 공존이야말로 21세기 벽두에 북한당국이 직면해야만 했던 ‘(미)선택의 딜레마’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낡은 것의 죽음의 고통과 새로운 것의 탄생의 산통이 뒤엉킨 불안정한 작품이 《신 역사사전》인 것이다.

셋째, 개정판 《력사사전》은 ‘역사는 흐른다’는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진리를 재확인 시켜준다. “권력이 바뀌면 역사책은 다시 씌어 진다”는 전래의 지혜가 북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정판 출간이 북한권력의 수평적인 교체를 기념하는 전시용 출판행사에 그치지 않고 “과거가 바뀌야 다른 미래가 보장된다”는 세계사적인 차원에서의 생존전략의 지침서로

승화(?)되었다는 점이다. 《구 역사사전》의 일부 발칙한 항목들이 수정·삭제되고, 너무 과격한 표현들은 순화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는 개정판을 기회주의적이며 일관성 없는 ‘삼류 역사사전’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 역사쓰기는 원래부터 권력/담론 구축하기이며 역사지식은 국가와 국민에서 헌신하기 위해 구축되는 그 무엇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적과 아군, 나쁜 놈과 좋은 놈, 관념론과 유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으로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던 초판의 경계선이 개정판에서는 형체가 희미하게 해체된 것은 결코 역사가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변한 탓이다! 어제의 동지는 사망하거나 나를 배신하고 오늘 내가 어제의 ‘원썩’과 악수를 해야 한다면, 이런 역사적 전환시대의 논리에 호응하여 과거는 당연히 다시 각색, 연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모든 견고한 것은 사라졌다”는 부르주아지문명에 대한 맑스의 유명한 경외감이 《신 역사사전》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더라도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구호에 묻혀버린 것이다.

개정판 《력사사전》을 덮는 필자에게 찾아온 마지막 단상은 “《력사사전》의 재개정판은 왜, 언제쯤, 누구에 의해 다시 출판이 될까?”라는 뜬금없는 의문이다. 비전공자의 무식함에 기대어 소망하건대, 제발 세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지 않기를. 역사서술의 오류를 고백하고 과거 사실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또 다시 수정·보완, 발굴·창조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즐거운 다른 일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덧붙인다면, 제3판 《력사사전》의 출현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찾아 헤매어야 하는 당사자인 북한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지켜보고 또 다시 ‘미래를 점쳐야 하는’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냉철히 조망하기 위해서 과거는 (때로는) 멈추어야 한다. 어제 분 바람은 나를 멈출 수 없다.